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 반발해 보름째 현장 떠난 전공의

‘불 꺼지는 수술실’ 상급병원 초비상

전대병원, 2개 병동 일시 폐쇄...필수의료과 중심 인력 재편 마취과 인력난에 하루 수술 10여건...각 병원 병상가동률 ‘뚝’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보름째 일선 병원을 대거 떠나면서 광주지역 상급종합병원에 초비상이 걸렸다.

6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이탈한 전공의 중 현재까지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전공의는 전남대병원(분원 포함) 160여 명, 조선대병원 100여 명에 이른다.

보름째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이어 ‘열린 데 닫힌 격’으로 숙련도가 높고 비상진료 체계를 지탱해 온 전임의들마저 속속 병원을 떠나고 있다. 기존 근무 전임의들은 수련 중단, 개업 등을 이유로 재임용을 포기했다. 이달부터 신규 총원 예정인 전임의들도 상당수 계약을 포기했다.

전남대·조선대병원은 일선에 남은 전문의(교수), 일부 전임의·전공의와 간호사 등 진료 보조 인력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 중이다. 그

러나 보름째 비상체계가 이어지면서 일부 제 기능을 하기 힘든 위기에 처했다.

전남대병원은 전날부터 응급 입원환자가 비교적 적은 성형외과·비뇨기과 등 2개 병동을 일시 폐쇄했다. 두 병동에 근무하던 의료진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심혈관내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 재배치했다.

위중증 환자 중심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하는 교육지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술실 가동률도 급감했다. 특히 주요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과 전공의들이 모두 이탈하면서 인력난이 심각하다.

평소에는 병원 내 수술실(14곳)이 상시 가동됐지만 전공의 집단이탈 장기화로 현재는 응급수술만 진행하고 있다. 하루 평균 수술은 10여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병동 내 병상도 평소와 비교하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조선대병원 역시 평균적으로 수술·병상 가동률이 평소와 비교해 40~50% 줄었다. 아직 비응급 진료과 인력 재조정에는 없지만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 누적에 심각, 재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과부하가 걸린 상급종합병원을 대신해 환자를 받아야 할 2차 병원에서는 일시 혼선은 있었지만,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소재 2차 병원 20곳 평균 병상 가동률은 66%다. 중환자실 역시 72%로 집계돼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진료과마다 고난도 시술 역량이 없거나 의료장비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한계도 명확하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현 인력 여건 상 상급종합병원은 생사가 달린 환자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의료진을 꼭 필요한 진료과 중심으로 재편해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2차 병원이 일부 역할을 분담하고는 있지만 특정 고난도 시술을 하기 어려운 의료진이 없거나 고가의 장비가 없는 경우도 많다.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보완하는 데 한계가 분명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집배원이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배송하고 있다.

‘청소년에 속아서’ 술·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안 낸다

여성이족부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 사업자의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6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저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선량한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16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확인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앞으

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CCTV등으로 신분증 확인 의무 입증되면 과징금 면제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시에 만 과징금을 면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

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 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슬비기자

계엄군 장갑차 깔려 숨진 권 일병 사건, 5·18조사위는 ‘규명 불능 결정’ 도마 위

“또다른 왜곡 시도 빌미 될 것 우려”

전두환 회고록 재판 과정에서 실제적 진실에 다가섰다는 결론을 도출해낸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장갑차 압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조사기관이 기존 결론보다 후퇴한 보고서를 내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4일 오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전에 참여한 군과 시위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5·18 당시 숨지거나 다친 군과 경찰의 규모, 부상과 사망 경우 등에 대한 기록과 진술 등이 담겼다.

내용 중 조사위가 1980년 5월 21일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11공수여단 소속 권 모 일병의 사건에 대해 ‘진상불능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사건은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대시민 집단 발표와 연계된 5·18 왜곡의 주요 뿌리 중 한 축이다. 그간 권 일병이 광주 시민들의 시위대가 몰던 장갑차에 치어 숨졌다는 신군부 측 주장과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진술이 뒤섞여온 탓이다. 신군부 측은 권 일병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어 숨졌으면서 자위권 발동과 대시민 집단 발표의 근거로 이용해왔다.

보고서는 ‘권 일병이 숨진 경우에 대해 일관적인 진술을 받아내지 못해 신체검안서를 통해서도 정확한 사인을 특정할 수 없었으며

개인 피해 관련 기록 조사와 목격자 등 참고인에 대한 대인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과거 광주고법이 해당 사건에 대해 신군부 측 주장을 허위 사실로 판결했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광주고법은 지난 2022년 9월 14일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5·18 당시 계엄군의 대시민 헬기 사격이 없었고 권 일병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어 숨졌다는 전두환 측 주장이 왜곡이라는 것이다.

판결문은 ‘(권 일병은) 시민들이 운전한 장갑차(도시형·차륜형·고무타이어 바퀴형)에 의해 들이받혀 사망(총격·총돌로 인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계엄군 장갑차(무한궤도형) 후진으로 무한궤도에 의해 깔려 사망(역과형 사망)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같은 대대 소속 이 모씨의 직접 목격 진술, 다른 장교 출신을 포함한 공수부대원들의 진술이 동일한 점을 토대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광주 지역 사회는 보고서 내용이 기계적인 중립에 치우쳤으며 또다른 왜곡 시도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고법 판결 당시 원고측 변호를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는 “보고서에서 판결문을 의도적으로 축소 언급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고서가 발간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변용일기자

화순군 문화관광
http://www.hwasun.go.kr/culture
문의전화 061) 379-3575-7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선사시대로 떠나는 봄소풍

2024. 4. 19.(금) - 4. 28.(일)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원